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6~7면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2면

미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
반길 일 아니다

3면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홍콩 항쟁과 그 후

8~11면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성명
카자흐스탄 항쟁 지지한다.
러시아는 개입 중단하라!

4면

반도체 지원 특별법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5면

노동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12면
SPC(파리바게뜨) 또 합의 위반 11면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5면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 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 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명에서 5대 핵보유국들은 “핵전쟁 시 승자는 아무도 없고, 핵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핵군축과 비확산 등 NPT의 의무를 이행하고, 군사적 갈등을 피하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만해협,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이번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들의 갈등이 최악의 경우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이번 성명은 강대국 지배자들이 이런 상황을 의식한 산물로 보인다. 자신들도 전쟁 위험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공동성명을 두고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주로 공동성명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끼칠 영향에 관심을 보였다.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해 준다’는 핵우산이 약화될까 걱정한 것이다.

우파들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 핵무기의 등장에 대응해 핵우산을 핵심 고리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 안보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핵전쟁의 그림자 아래에 계속 살겠다는 미친 생각이다.

실효성

한편 <경향신문>, <민중의소리>는 공동성명의 의의를 사는 사실을 봤다. “이번 공동성명이 … 긴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경향신문>), 몇몇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공동성명을 발판으로 더 공고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 사회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민중의소리>)는 것이다.

5대 핵강국의 공동성명이 이렇게 기대를 걸 만한 약속일까? 이 성명에는 법적 구속력조차 없는데 말이다.

201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평화 단



강대국 간 합의는 평화 보장 못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앞바다에서 미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와이오밍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모습

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사무총장인 베아트리스 핀은 이렇게 지적했다.

“저들[5대 핵강국]은 성명서는 번지르르하게 쓰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핵군비 경쟁을 벌이고,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며,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핵전쟁 태세를 상시 갖추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 [핵무기는] 침략을 억제하며, 전쟁을 방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는 방어용이란 핑계로 핵공격 태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서명 당사국들 사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

중국은 전 세계 핵무기 중 9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해야 하고 자국은 핵무기 현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중국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은 새로운 핵군축 협상에 미·러 외에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견제하고 자국 핵전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서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완성하는데,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보고서에 포함할지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 논란이 거듭돼 왔다. 미국은 5대 핵강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 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하는 국가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이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 다른 제국주의 경쟁자들을 의식해서다.

지난해 10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적대적 관계가 커지고, 이 두 전략적 경쟁자들이 미국의 동맹국들과 여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에 가하는 위협이 점증하[면서] … 오늘날 “핵 선제 불사용”이 바이든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 채택될 확률은 크게 떨어졌다.”

제국주의적 경쟁

한편 이런 논란과 무관하게, 바이든 정부는 전임 오바마·트럼프 정부의 핵무기 전력 강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은 정말 미친 짓이다. 인류에게 훨씬 유익한 곳에 쓰여야 할 자원과 기술이 인류 전체와 문명을 파괴할 수단을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는 분명 비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적 발전과 경쟁의 논리적 귀결이다.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자원과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고 무한 경쟁을 벌인다. 이런 축적 경쟁의 압력 때문에 자본가들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고, 기후 위기 같은 장기적인 위험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들과 연계를 맺은 국가들은 자국의 힘을 입증하려고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더 많이 축적하려 한다.

따라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 경쟁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전쟁으로 자신들이 쌓아온 부가 몽땅 파괴될까 봐 걱정하지만, 체제의 수혜자로서 이 정신 빠진 군비 경쟁을 멈출 생각은 하지 못한다.

역사에는 강대국들이 평화 공존을 약속하며 맺은 수많은 협정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경쟁은 그 합의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가령 냉전이 절정일 때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위협을 통제하려고 협정들을 맺었다. 그러나 냉전 해체 이후 자국의 패권이 약화되자, 미국은 기존 약속을 뒤집고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나섰다.

중국이 새로운 라이벌로 부상하자, 2019년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에 대응하려고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해 버렸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나머지 세계에 관철시키려 해 왔다.

이것이 핵무기 문제에서 거대한 위선을 낳았다.

미국은 실효성 없는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으로 생색을 내면서, 정작 북한·이란 등에 대해서는 핵개발을 포기하고 NPT 조약을 준수하라고 협박해 왔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대북 제재를 추가했고, 북핵 문제는 “NPT 체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라며 다음 NPT 검토 회의에서 그 문제를 주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핵잠수함은 핵확산과는 상관없다는 궤변을 떠들면서 말이다.

위선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발표 후 1월 5일 북한이 새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아마도 미국 등 강대국들의 위선과 위협에 대한 북한식 응답이었을 것이다.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지난해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기대를 걸었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사용, 사용 위협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5대 핵강국들은 이 조약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미·중·러 등의 전략적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핵무기금지조약 발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핵무기를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려면, 서로 경쟁하며 위험을 키우는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권력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의 근본 배경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김영익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 ★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 ★ 계속되는 젠더 갈등 논란 급진 페미니즘과 좌파가 돌아볼 점
- ★ 설 대목 앞두고 인력 총원 요구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 ★ 집배원·우편물 분류 노동자도 인력 증원을 요구한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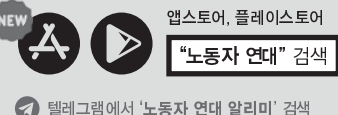
wspaper.org/subs2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보세요



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 반길 일 아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17년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마다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 왔다.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모범 단협안'(기준 단협안)에 성소수자 권리가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글도 올렸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주류는 미국 대사관의 이런 행보를 환영해 왔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여러 해 동안 축제 부스에 미국 대사관을 유치해 왔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있는 듯하고, 미국 국가 기구의 지원을 얻는 것이 친미적인 한국 보수파들을 침묵시키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는 듯하다.

좌파 일부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다. 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단협안 지지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고 칭찬하고, “한국의 고용주들도 분발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좌파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의 운영위원 권수정 금속노조 여성상담 부위원장도 “심지어 주한 미국 대사관이 금속노조를 지지한다고!!” 하며 호쾌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의 이런 지지는 제스처일 뿐이며, 그조차 결코 거저가 아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이 그것을 받기며 그들에 대한 환상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본지는 지적해 왔다. 이는 국제 성소수자 운동의 급진 좌파들이 강조해 온 바이기도 하다.

미국 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은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저지른 악행을 가리려는 전형적인 “핑크워싱”이다.

최근에는 이런 위선이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일각에서도 반감을 일으켜, 2020년부터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부스에서 미국 대사관이 빠졌다. 특히,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하자, 미국 지배자들의 위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밝히 드러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성소수자 운동 주류와 일부 좌파가 여전히 미국 대사관의 지지를 반기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정치적 실용주의와 성소수자 예외주의의 산물인 듯하다. 미국 지배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그 의도가 얼마나 위선적이든 간에 예외적으로 성소수자 문제에서 만큼은 미국 대사관의 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한국 성소수자들의 처지 개선에 도움이 될까?

지렛대

미국 대사관이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일부 성소수자들에게는 ‘사회 주류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미국 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은 제국주의적 악행을 가리려는 핑크워싱에 불과하다

성소수자의 차별 완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주요국 대사관들이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수년째 참가해 왔지만, 개최 장소·행진 코스조차 쉽게 얻었던 적이 없다. 개신교 우파는 집회 신고 단계부터 집회 가처분 신청 등으로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더구나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등 보수 후보들은 이 축제를 도심 외곽으로 밀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미국 대사관 측을 인용해 이렇게 반박했다. “2015년에도 리퍼트 미 대사가…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고 참석한 것이 영광스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껏 집회의 권리는 만만찮은 항의를 통해 쟁취해 왔던 것이지, 미국 대사관의 권위를 빌어 얻은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도 불허했다.(현재 행정심판 중이다.)

미국 대사관의 성소수자 지지는 겉치레인 반면 한국 지배자들과 우파 사이의 이해관계 수렴(가족 수호, 우파 결집 등)은 실질적이다. 때문에 (성소수자 운동 일각의 기대와 달리) 미국 대사관의 지지는 성소수자 권리 개선의 지렛대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92조의 6 폐지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를 위한 개혁입법을 성취하려면 만만찮은 대중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미 유엔이 차별 시정을 수차례 권고했어도 한국 정부는 꿈쩍도 안 했다.

그렇다고 미국 대사관(혹은 유엔) 더러 겉치레(혹은 점잖은 권고)를 넘어 지렛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안일까? 일부 온건 개혁주의자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은 적대 국가의 성소수자 억압을 비난할 줄은 알아도(그러나 우방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정작 자국에서 성소수자 난민 수용은 한사코 거부해 왔다.

무엇보다도, 미국 대사관의 지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성소수자들이 차별에 맞서 스스로 대중 투쟁을 하는 것을 고무하기보다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를 걸게 함으로써 수동성을 강화한다.

성소수자 운동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소수자 운동을 더 넓은 사회운동과 분리시켜 협소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미국 제국주의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는 것이 반제국주의적 운동과 정서적으로 이반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다수 한국인들은 분단과 친미 독재정권의 경험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크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의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사적으로, 주요한 개혁은 모두 아래로부터의 만만찮은 투쟁을 통해서 성취됐지 권력자들의 선의로 선사된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 운동은 차별과 착취에 맞선 광범한 저항의 일부로 자리잡을 때 성장할 수 있고 실질적 개혁도 성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혁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질문도 던져야 한다. 설사 운동의 성과로 일부 개혁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부과하는 한계 때문에 매우 불충분할 수밖에 없고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 권력자 일부와 연대하는 방식은 성소수자 운동 내 일부 중간계급 활동가의 지위 향상을 가능케 할지는 몰라도, 대다수 성소수자들(노동계급 소속이다)의 처지를 개선시키지는 못한다.

미국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여러 주에 생기고,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분명 진보였다. 하지만 그곳 성소수자 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계기로 미국에서 동성애자 차별도 거의 끝났다고 본 것은 옳지 않았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다.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도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는 성소수자 권리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핑크경제가 성장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일부 중간계급 전문직 동성애자들이 상대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동안, 차별을 완화할 물질적 부를 갖고 있지 못한 하층계급의 동성애자들은 차별이 가하는 고통과 압박에 크게 시달려 왔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지배자들과 우파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해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것만으로도 트랜스젠더 43명이 살해됐다. 지난해 8개 주에서 트랜스젠더에 적대적인 법안 25개가 통과됐고, 33개 주에서 130개 이상 발의됐다.

성소수자 차별은 다른 차별들과 마찬가지로 이윤 획득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고,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각개격파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성소수자 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해방되려면 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임과 동시에, 더 넓은 사회의 근본적 변혁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성소수자 지지자들은 미국 대사관의 말뿐인 ‘성소수자 지지’를 받기며 환상을 조장해선 안 된다.

성지현

왜 미국은 성소수자 친구인 양 행세할까?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자들은 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의 대외정책에 언제나 ‘민주주의’, ‘인권’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해 왔다. 조지 부시 2세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를 침공하며 여성 인권을 들먹였고, 바이든도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맹을 결속시키려고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지배자들은 이런 레토릭으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국내의 피차별 대중의 동의를 구하려고 한다.

‘성소수자 인권’은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 대외정책에 사용하는 미사여구의 하나가 됐다. 2011년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국제 인권의 날’ 기념 유엔 연설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는 인권이라며, 동성 간 관계를 처벌하는 국가들을 비판하고 미국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이 6월에 무지개 깃발을 걸기 시작한 것도 오바마 정부 때부터다.

이것은 특히 미국이 벌이던 ‘테러와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내세운 ‘성소수자 인권’은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용됐고, 이슬람 혐오는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핑크워싱

이후 핑크워싱은 미국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대외 전략의 하나가 됐다. 심지어 성소수자에 적대적이던 우파 트럼프 정부조차 2019년 이란을 압박할 수단으로 ‘동성애자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친화적 이미지를 내세워 진보 운동 일부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서 미국이 진정으로 노리는 바는 분명하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를 더 불안정하게 하고 군비증강으로 내몰기 때문에 대중의 반감과 저항을 부른다. 이런 반감을 누그러뜨리며 한미동맹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대중의 동의를 일부 얻을 필요도 있다. 이런 일은 각 국가 대사관이 하는 ‘외교’의 일부다.

2019년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대사관 건물에 붙이는 무지개 깃발의 크기를 3배로 키우고, 직접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이를 우호적으로 보도했다. 몇 달 뒤 그는 한국에 방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항의하며 미국 대사관저를 ‘월남한 학생들을 비난했다. 또,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고작 무지개 깃발 게양 같은 알팍한 성소수자 지지조차 공짜가 아닌 것이다.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성명

카자흐스탄 항쟁 지지한다. 러시아는 개입 중단하라!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러시아의 푸틴이 카자흐스탄 시위 진압을 위해 대규모 파병을 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사회주의 경향'이 1월 8일 성명을 발표했다. 푸틴은 카자흐스탄의 시위가 미국이 배후에 있는 '색깔 혁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성명은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지와 연대 확대를 호소한다.

1월 초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분출했다. 이 시위는, 자동차 연료 가격이 리터당 50텡게[140원]에서 120텡게[330원]로 배 이상 오른 데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로 시작됐다.

시위는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된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 특히 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깊은 자나오젠시(市)에서 시작됐다. 2011년 자나오젠의 광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당국은 국가 폭력으로 대응했고 노동자 시위대에 발포도 했다. 당시 노동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타협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자, 시위는 악타우·자나오젠·아티라우 등 카자흐스탄 서부 도시들뿐 아니라 전국으로 번졌다. 현재 항쟁은 우랄스크·악퇴베·코스타나이·누르술탄·파블로다르·타라즈·שמ켄트·키질로르다 등을 휩쓸었다. 카자흐스탄 남동부 도시 알마티는 무력 충돌이 가장 첨예한 곳이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연료비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뒤늦은 것이었다. 이는 시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번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위대가 요구를 확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요구들은 광범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관계들과 연관이 있다. 아래는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의 요구 중 일부다.

1. 정권 교체
2. 혁명가로 인정받는 인물의 집권
3.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와 그 일파 모두를 — 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를 포함해 — 완전히 몰아낼 것
4. 모든 주와 시에서 '아킴'(시장·주지사) 직선제 도입 (현재는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5. 1993년 헌법으로의 복귀 (당시 헌법은 오늘날 헌법과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국가의 입법 기관이 국회가 아니라 '최고소비에트'였다.[현재의 의회는, 나자르바예프가 1994년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당시의 최고소비에트를 해산시킨 뒤 세운 것이다.])
6. 인권 운동가, 정치 운동가들을 처벌하지 말 것
7. 주택 가격, 공공시설 이용료 인하
8. 식료품 가격 인하
9.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10. 상병 수당 인상



저항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해야 한다 1월 5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알마티에서 벌어진 시위

11. 연금 인상
12. 퇴직 연령을 남성 60세, 여성 58세로 낮출 것
13. 연료비 인하
14. 아동복지 확충

이런 요구들을 봤을 때,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이번 시위를 이끄는 주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의 자유 확대나 법인세 인하 같은 요구는 여기서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시위에 나선 대중 사이에서 부르주아지나 프티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이 작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당국이 시위대의 요구를 전부는 고사하고 상당 부분 들어주는 것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드러내자, 시위는 전면적 반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 채굴 산업에서 전국적 파업이 벌어진 것도 정부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이 항쟁은 폭력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항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각급 정부 청사 건물들로 쳐들어가고, 군인과 경찰을 생포해 무장 해제시키고, 총기 상점에서 소형 화기를 탈취[해 무장]하고, 바리케이드를 쌓고 거리를 순찰한다.

이런 모습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알마티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알마티에서 항쟁 참가자들은 알마티 '아킴'을(시청)를 점거한 후 불태워 버렸고, 대통령궁에 불을 질렀고, 시 경찰청과 군 사관학교를 습격하려 했다. 한때 보안 병력이 알마티에서 전면 철수하기도 했다.

정부 측은 항쟁에 나선 사람들이 절

도와 약탈을 일삼는다고 매도했다. 하지만 항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약탈범을 수색·저지하기 위해 순찰을 자체적으로 조직했다. 몇몇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절도와 약탈을 부추길 목적으로 수감 중인 범죄자들을 고의로 풀어줬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 토크예프가 시위 분출 얼마 후 몇몇 타협을 했음을 지적할 만하다. 토크예프는 연료비 인하 및 동결, 내각 해산, 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를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에서 해임하고 토크예프 자신이 의장직을 맡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발표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 것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자신의 후계자인 토크예프를 대통령에 임명하고 권력을 이양한 뒤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자기 딸과 함께 러시아에 숨어 있다.

문제는 현 대통령 토크예프에게는 개혁을 시행하고 항쟁의 요구를 수용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항쟁이 계속되는 데에는 이런 점이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군대와 경찰 병력 일부가 항쟁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장 군인과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향한 무력 사용을 거부하고, 몇몇은 시위대 측에 합류하고 있으며, 부대 하나가 장갑차들을 끌고 항쟁 측으로 넘어왔다는 등의 증언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CSTO의 반혁명적 개입

상황이 급박하게 발전하면서, 토크예프가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병력으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그래서 1월 5일 토크예프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후 토크예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대표를 보내, 카자흐스탄에 개입해 “국가의 안정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CSTO가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 방위 조약이라, 토크예프는 이 항쟁이 외부 세력과 “테러리스트”의 소행이고 외세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야 했다.

CSTO는 토크예프의 요청을 받아들여 카자흐스탄에 파병키로 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에 개입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병력 3000명), 벨라루스(500명), 타지키스탄(200명), 아르메니아(70명).

키르기스스탄은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파병을 거부하고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진압 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파병 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과 연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1월 7일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파병 명령에 서명했다.

벨라루스·타지키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은 현재 러시아의 반(半)식민지이고 러시아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위치다. CSTO 회원국들이 형식적으로는 서로 대등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러시아의 뜻에 군사적·정치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신속한 승리”를 얻어내는 데에 또 한 번 실패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오히려 러시아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오랫동안 주둔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몇몇 다른 갈등들과 결합돼, 카자흐스탄 주둔은 장기적으로 반동적 푸틴 정권의 몰락에 일조하게 될 수도 있다.

러시아 병력이 카자흐스탄에 장기 주둔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인민 공화국”(LPR)·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운동과 유사한 “공화국” 분리주의 운동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국수주의자들과 관련 언론인들은, 러시아계 주민과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인 카자흐스탄 북부를 점령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 국수주의자들은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계 주민들이 인종 적대와 러시아 혐오 때문에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간섭과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의 카자흐스탄 점령 주장이 러시아 혐오를 촉발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에서 항쟁을 벌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반(反)러시아적 주장이나 정서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카자흐스탄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인종 적대, 소비니즘,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요구·슬로건을 내걸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은 러시아 국수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1월 7일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소요와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알마티에서는 혁명 지지자들과 군대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군들이 시위를 진압하려 카자흐스탄에 도착하고 있다. 정부의 병력과 반정부 시위대 양측 모두에서 이미 사망자가 수십 명, 부상자는 수백 명을 헤아린다. 시위대 3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카자흐스탄 항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연대가 필요하다. 외세의 개입에 맞서 혁명이 승리하려면, 파병국들 본토에서 벌어지는 대중운동의 구실이 중요하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벌어진 내전 때도 침략군을 보낸 나라들에서 거대한 파업이 벌어졌고, 그 나라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계급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 가담하기를 꺼렸다.

이런 과거의 교훈을 우리 모두는 오늘날 나아가야 할 선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번역 김준호

용어설명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러시아가 옛 소련 공화국 6개국을 모아 2002년 결성한 안보 협의회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회피하는 것이다.

공정수당의 모태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한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이라 할 수 있는데, 본지는 이 정책의 한계를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331호,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선, 고용 불안정을 보상한다는 거창한 말과 달리 그 보상 수준이 너무 미미하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은 6개월 기간제가 퇴직할 때 98만 원, 1년 기간제가 퇴직할 때 129만 원을 지급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0~16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셈이다. 이 정도로는 계약 만료 후 한 달 생활비도 안 된다.

고용 유연성

이재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본다. 공정성 논란을 의식하는 것이다.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다.

한편, 여기에는 기업 입장을 고려해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제돼 있다. 실제로 이재명은 공정수당이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고용 유연성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불안정에 대한 ‘보상’이라는 접근이 근본적 한계를 갖는 이유다.



김민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잦은 재계약과 업체 변경 등을 겪으면서 악조건을 강요받는다. 사용자들이 법적 책임과 의무도 회피하기 쉽다. 고용이 불안정하면 노동자들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공정수당이 전제하듯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임시적인 것도 아니다. 적잖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지만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따라서 그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공정에 부합한다.

사실상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에게 돈을 아주 약간 더 주면서, 조건 개선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정규직화를 사용자들이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파산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이재명에게 기대를 걸었을 수 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민간위탁 부문에서 일부 직접고용을 추진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노동계가 요구해 온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바가 없다. 이번에 공정수당을 제시한 맥락과 근거는 되레 이런 노동계 요구들과 사실상 대립된다.

양효영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경쟁 기업에게서 내부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은폐할 필요가 있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 “영업비밀”을 내세워 왔다.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주들에게 “국가핵심·전략기술”이라는 명목까지 더 쥐어 주는 셈이다.

반올림, 오픈트 등 12개 노동·안전보건 단체들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무엇이며 그 기술이 ‘포함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 결국 그 기술을 보유한 사업주가 은폐하고 싶은 모든 정보들이 곧 ‘관련 정보’와 ‘포함된 정보’가 되고 말 것이다.”

기준에도 산업기술보호법이 이런 구실을 하면서 악명을 떨쳐 왔는데, 이번 특별법은 영업비밀 유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특별법에는 반도체 기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인·허가 절차 등 규제를 축소·면제해 주고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포함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이라 불려 왔다. 2018년 법원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삼성이 즉각

해당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에 장단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정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 맞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9년 8월 국회가 영업비밀 비공개 영역을 확대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반대는 한 표도 없었다.(이에 동참했던 정의당 의원들은 이후 사과하면서 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는 한·일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여야 막론 정치권과 재계가 한목소리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일명 ‘소부장’)의 일본 의존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반도체 기술 또한 핵심 국가 이익으로서 보호·육성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적 이윤 경쟁

정부와 국회가 노골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감싸는 것은 단지 삼성이 로비하거나 압박한 결과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자국 핵심 자본이 얼마나 번성하느냐에 의존하는 국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은 오늘날 국가 안보 문제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2021년 5월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 보고서(여기에 이번 특별법의 초벌적 내용이 담겼다)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속도전을 진행 중이다. ...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다. 민·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적 규모로 벌어지는 치열

한 이윤 경쟁은 국가 간 경쟁으로 발전한다. ‘K-반도체 전략’ 보고서가 발표된 날 대통령 문재인은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경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에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강대국은 경쟁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을 자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에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포함되면서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은 듯하다.

세계적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 정부도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는 “9년째 수출 1위를 지속 유지 중인 국가 제1의 산업”(위 보고서)이다.

자본주의의 무한 이윤 경쟁 논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다.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자국 자본을 보호·강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갈등을 추동한다.

그러한 세계적 경쟁의 심화가 다시 국내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착취와 위험한 노동 조건에 맞선 투쟁과 제국주의적 갈등에 반대하는 투쟁이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이유다.

반복되는 산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알 권리, 진실이 짓밟히는 현실을 끝장내려면 이윤 경쟁에 눈먼 기업과 그들의 이익을 지켜 주는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한다.

김승주

독자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김영익 기자의 《미중 카르텔》 서평을 읽고

지난 호에서 김영익 기자는 박홍서 한국외대 연구교수(이하 직함 생략)의 《미중 카르텔》을 서평하면서 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을 잘 반박했다. 여기서는 그런 주장의 정치적 함의에 관해 몇 마디 덧붙이려 한다.

박홍서는 일종의 균형 외교론을 실천적 결론으로 내놓는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경제 전략

의 선봉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중국에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박홍서는 미·중 모두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두 국가의 줄 세우기를 거부하면서 이런 주장을 편다.

그러나 제국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는 관점은 없다. 그가 줄 세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제국주의 갈등에 일조하는 것이어서가 아니다. 미·중이 지금 패권 경쟁이 아닌 “갈등적 상호의존” 관계이기에 그

들의 줄 세우기에 휘말리는 게 손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미·중의 경쟁 상황을 이용해 국익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주도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열강이 지배하는 기존 국제 질서 속에서 평화를 증진하려는 시도는 현실에서 언제나 상당한 제약과 모순에 직면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물론 박홍서도 이런 어려움을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그는 독자적 국방력 강화 주장으로도 나아간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아시아의 불안정 약화에 일조할 것이다.

게다가 이는 기존 동맹 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가 ‘자주 국방’을 외치며 도입한 F-35A 전투기는 미국 동맹 체계 내의 병참 체계 속에서 운용돼야만 하는 무기다.

평화를 위해서는 결국 경쟁을 근본 동학으로 하고 국가 간 갈등을 낳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자체에 맞서는 과제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박홍서는 이런 체제에 맞서지 않으면서 평화를

이를 가능성을 모색하므로 공상적이다.

카우츠키는 세계대전의 전운 속에서 초제국주의론을 주장했다. 이는 전쟁 반대와 자본주의 반대를 분리시킨 것이었다. 국가와의 대결을 피하고 사회주의라는 과제를 평화 시기로 미뤄 의회주의적 전략을 실현시킬 전망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일부 좌파가 박홍서와 같은 주장에 관심을 갖는 것도 미·중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반제국주의의 관점을 버린 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원웅

탈성장, 기후 위기의 대안인가

장호중

이 글은 1월 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 운동 안에서 탈성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성장론 저작들이 활발히 번역 소개되는 등 탈성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탈성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논자들에게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고 보면서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경제 성장을 멈추거나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고인이 된 김종철 전 《녹색평론》 편집자는 2008년 경제 위기 직후 열린 한 토론회에서 “성장이 멈췄다. 우리 모두 춤을 추자” 하고 말쑤한 바도 있다.

근본 생태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욕구 자체에 환경 파괴의 씨앗이 있고 이를 무분별하게 발현하는 자본주의가 환경 파괴를 낳는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를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만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 탈성장론자들은 이런 근본 생태주의와의 차이를 강조한다. 《디그로쓰》의 저자 요르고스 칼리스는 최근 유행하는 탈성장론의 대표 주자이다. 그는 “경제 성장 추구의 동력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는 통상적 확신을 뒤엎고자 한다”면서 오늘날 경제 성장을 향한 끝없는 강박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사회문화 시스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 역시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야말로 진정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을 멈출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언급하면서 자신이 제안하는 탈성장이 이런 상황을 감수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그런 고통은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던 경제가 불시에 급정지하거나 추락하며 생기는 현상이므로, 계획적인 탈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탈성장론자들이 환경 파괴의 원인을 개인의 이기심이나 인간 본성 같은 것에서 찾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보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기후 변화 아닌, 체제 변화!’라는 구호가 보여 주듯 이는 기후 운동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져 온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에 대한 이들의 비판에는 정말 공감할 바가 많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을 향한 맹목적 집착이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7면 상단의 그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실질 GDP와 1차 에너지 사용, 대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함께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보여 주는데 학자들은 1950년대 이후의 이시기를 ‘대가속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이란 누가 더 빨리 많은 이윤을 축적하느냐 하는 경쟁의 성적표 같은 것이다. 자본가들 사이의 축적 경쟁은 자본주의 체제가 돌아가는 근본적 동인이다. 경쟁하에서 개별 자본가는 생산이 환경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어떤 자본가가 몇십 년 뒤 지구 생태계를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다면 심중팔구 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탈성장론자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자본주의의 집착을 주로 성장 이데올로기의 효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성장에 대한 집착을 의식의 문제라고 보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탈성장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집착은 물질적 조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했듯 그것은 어떤 편견이나 마음가짐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다. 가차없는 경쟁 논리에 의해 모든 자본주의 생산 단위에 강요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내재된 물질적 동인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축적하고, 또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 오경과 예언서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끝없는 성장 추구가 낳는 환경 파괴를 멈추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탈성장’이 새 사회의 운영 원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탈성장 해법이 기후 위기와 환경 재앙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겠다. 먼저, 탈성장이 새 사회의 작동 원리로 적절한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후 운동의 전략이자 요구로 탈성장을 채택하자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새 사회의 작동 원리로써의 탈성장에 대해 얘기해 보자. 기후 위기를 멈추려는 사회라면, 당연히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대량 보급할 것이다. 승용차 이용과 오염을 줄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할 것이다. 단열이 뛰어난 최신 기술로 지은 주택을 보급해 난방 에너지의 수요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필수적인 몇 가지 조치들만 따져봐도 새로운 사회에서는 어떤 것은 탈성장해야 하고(화석연료와 승용차), 어떤 것은 성장해야 한다(재생에너지, 대중교통, 주택 등)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끝을 모르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다수는 풍요는커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화석연료 산업에서 탈성장이 필요하지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와는 다른 성장도 필요하다.

녕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흔한 착각과 달리 인류가 두루 풍요를 누린 결과로 환경이 파괴된 것이 전혀 아니다.

개도국과 빈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에서도 빈곤이 증대해 왔다. 전 세계에서 1분마다 11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무려 3400만 명이 기아 혹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는 자본주의하에서 환경과 함께 고통받은 인간 수십억 명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요컨대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서도, 빈곤을 해결하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성장과 탈성장이 모두 필요하다. 단순히 탈성장을 새 사회의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적을수록 풍요롭다》의 저자 제이슨 히켈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경제의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축소돼야 한다.” 그러나 다시 이를 모두 뭉뚱그려 탈성장이라고 함으로써 합리적 핵심에서 벗어나 버리고 만다.

내가 보기에 이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의 가정을 일부 공유하기 때문인 듯하다.

예컨대 제이슨 히켈을 포함해 기후

운동 내 탈성장론자들은 흔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도 많은 양의 희토류 금속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로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어쨌거나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하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절대량’에 고정된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이 자연을 대규모로 활용하려 하면 환경 파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연결되기 쉽다.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는 적절한 방식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고,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인간 본성이 파괴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결국 과잉인구론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해서는 안 된다》의 저자 마야 괴펠을 비롯해 적지 않은 탈성장론자들이 종종 아무렇지 않게 ‘인구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한 세기도 전에 맬서스의 과잉인구론이 사이비 이론에 지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논증했다. 오늘날에도 과잉인구론은 저개발국가와 유색인종 등을 겨냥해 제기된다. 환경 재앙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이런 인종차별적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인 존 벨라미 포스터는 탈성장 이론가들이 경제 성장에 관한 주류 경제학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탈성장’이라는 개념도 뒤틀려 버린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을 짓거나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성장’에 포함되지만, 돈을 빌리거나 무기를 생산하거나 투기를 벌여도 다 ‘성장’으로 측정된다. 그런 일들이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은 단지 재화와 서비스의 증가뿐 아니라 온갖 쓰레기의 양산과 엄청난 파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탈성장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환경을 위해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 주류 경제학의 개념 그대로의 성장을 거부한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탈성장’ 지지로는 대중 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

이제, 기후 운동의 전략이자 요구로 탈성장을 채택하자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다. 탈성장론자들은 대개 탈성장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기후 운동의 요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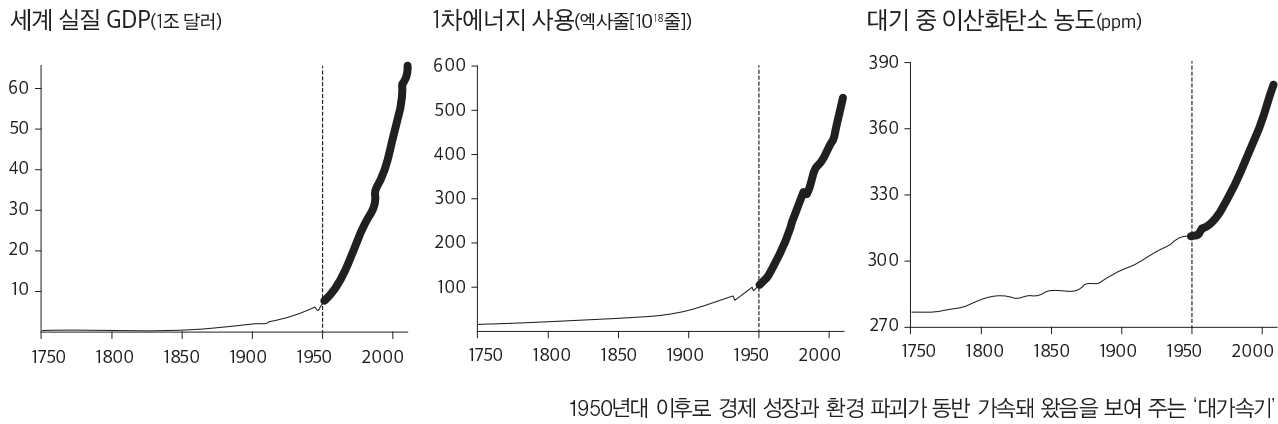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구로 채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성장 은 공상이다. 지배계급이 자국 경제나 회사를 탈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보통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경제 가동으로 밀어넣는 것을 떠올려 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에 탈성장론자들이 내놓는 대안은 용두사미가 되곤 한다. 가령 <디그로쓰>의 저자 요르 고스 칼리스는 경제 성장 없는 그린뉴딜, 포퓰 기본 소득과 서비스, 커먼스(공공재) 되찾기, 노동시간 단축, 공공 금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탈성장이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저 상당 부분 지지할 만한 개혁 요구들일 뿐이다. 칼리스 자신도 “경제성장 시스템을 거창하게 비판하고 나서,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정당들이 발전시킨 프로그램들에 주목하는 모양새가 용두사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인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꽤 괜찮은 개혁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대중운동이 필요한데, 탈성장 요구로는 대중운동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탈성장을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실업과 빈곤, 더 극심한 대중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백 년 동안 성장에서 배제되고 기후 재난의 피해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빈국과 개도국의 평범한 대중에게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조차 탈성장 주장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운동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도 많다. 자본주의 정부가 기후 위기를 멈추고 대중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겠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인가?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요금 인상에 불만인 노동 대중을 혼계하며 정부 정책 편을 들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도 결국 환경을 파괴한다며 지금 있는 핵 발전을 이용하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실제로 제이슨 히켈은 비슷한 이유로 핵 발전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싸우는 노동자들, 예컨대 프랑스 노란조끼 같은 운동에 연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탈성장론은 이처럼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기후 위기를 멈추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탈성장을 추구한다면 일관되게 그러기 어려울 것이다. 탈성장을 추구한다면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 요구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전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되 그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경 복원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 비용은 그동안 화석연료 사용으로 부를 쌓아 온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기후 운동은 탈성장 요구를 내세워 노동계급과 소원해지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군비를 감축하고 화석연료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요구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들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더 많은 대중교통 수단, 더 많은 주택과 복지, 더 많은 소득 지원, 빈국과 개도국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등 말이다.

이런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건설할 때에만 기후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운동에 동참시킴으로써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노동계급의 기후 운동 동참은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진정한 체제 변화를 이룰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세계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이 사적 이윤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 즉 사회적 필요를 위해, 전쟁이 아니라 복지를 위해, 자본 축적과 사치품 소비가 아니라 더 많은 학교, 병원, 주택, 문화를 위해 이뤄질 것이다. 혁명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를 운영할 자신감을 획득한 노동계급은 그들의 존재 조건에 합당한 방식으로, 즉 집단적으로 생산하되 사장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주적 결정을 통해 생산과 사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련과 중국 같은 사회를 보면서, 사회주의 사회도 성장을 중시하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 같은 기본적 권리조차 억눌리고 민주적 계획은커녕 생산당 관료들의 지령에 따라 생산이 이뤄진 소련과 북한, 중국 같은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볼 수 없다. 그 나라들에서 생산이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다른 기업·국가들과의 경쟁에 종속돼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 체제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국가자본주의라고 봐야 한다.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주적으로 조직되는 체제로 대체돼야 한다. 그런 세계만이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 2021년 2월 27일 개정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뷰

홍콩 항쟁과 그 이후

2019년 홍콩 정부의 송환법 발의가 투쟁 물결을 촉발하면서 홍콩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었다. 한국에서도 이 항쟁에 대한 지지 캠페인과 연대 시위로 벌어졌었다. 홍콩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령**이 홍콩 항쟁, 그 항쟁의 기원이 되는 이전의 사회 운동들, 2019년 항쟁 이후 벌어진 일에 관해 영국의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과 이야기한다. 람치령은 홍콩 '레프트21' 회원이며 《후기 천두슈 선집》의 편집자다. 그는 홍콩 태생으로 광저우 지난대학교를 다녔고, 1989년 톈안먼 항쟁 연대 운동에 참가했다. 이후 홍콩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분출했던 홍콩 운동은 현재 대체로 종료

현재 서방 언론 보도에서는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조한다. 2019년 홍콩에서 중국의 송환법 도입 시도에 맞서 분출했던 운동이 현재는 진압된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러한가?

송환법 반대 운동은 진압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10월 현재 1만 265명이 체포되고 2684명이 형사 범죄로 기소되고 이 중 720명이 소요죄로 기소됐다. 활동가 9명이 자결했고 시위자 일부는 살해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운동은 2019년 3~4월에 소수가 참여한 연좌 농성과 행진으로 시작됐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6월 9일 광범한 대중 시위로 발전했다.² 시위가 고조되면서 6월과 8월에는 각각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행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만 명이면 홍콩 주민 네 명 중 한 명이 참여한 셈이다. 또, 7월 1일에는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 건물을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데 성공했고 8월 5일에는 정치 파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중등학교 학생들이 9월에 대거 인간 사슬을 만들며 시위를 벌

였고, 시위대와 학생들이 홍콩이공대와 홍콩중문대를 점거했다.

11월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일 때 운동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말 홍콩에서 코로나19가 퍼지자 계획된 시위가 취소되거나 축소됐으며, 그 후 중국 정부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해 6월 30일에 극도로 반동적인 국가보안법을 관철시켰다.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6월 4일 홍콩 전역에서 자발적인 촛불 시위가 열리는 등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대중운동은 대체로 끝났다.

1. 이 법은 중국 정부가 재판을 위해 중국 본토로 범죄 용의자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송환법 반대 운동은 이 법이 홍콩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중국 중앙정부에 넘겨주고 정치적 탄압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홍콩 특별행정구는 1997년 홍콩 영토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뒤 설치된 것이다. 홍콩은 “일국양제”라는 원칙 아래 중국 본토와 분리된 경제·정치 체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은 제1차 아편전쟁(1838~1842년) 종전 이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돼 영국 정부가 임명한 총독의 통치 하에 있었다.

코로나와 특히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저항 억제 수단이 되다

코로나19 등의 요인들이 저항의 패턴을 어떻게 바꿨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시위가 잦아든 후의 상황은 어떠한가?

송환법 반대 운동에서 추진력을 받아 2019년 말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잇달아 설립됐다. 일선 공공의료 노동자들이 설립해서 2만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공공 병원 노조인 의관국원 공진선(HAEA)도 그런 사례다. 이들은 2020년 2월 3일부터 5일간 파업을 벌이며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제공하라고 홍콩 의원관리국에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중국 본토와의 출입을 즉각 통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홍콩에서 코로나19 초기 국면은 홍콩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의 성장을 가속시켰다. 사람들은 조직되지 않은 거리 행동보다 조직 노동계급이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서 더 낫다는 것을 경험했다.

홍콩에서 코로나19는 2020년

2~4월에 가장 심각했고, 5월부터는 상황이 점차 나아졌다. 그러나 팬데믹이 완화됐음에도 홍콩 정부는 집회 제한 지침을 해제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노동절 행진을 불허했다. 홍콩 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이용해 6월 4일 톈안먼 항쟁 기념일, 6월 9일 송환법 반대 운동 기념일, 7월 1일 홍콩 반환 기념일 등 “민감한 날짜”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를 막는다.

2020년 6월에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애초 입법 취지대로 대중 저항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법은 매우 가혹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은 홍콩 독립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국가 권력 “전복” 활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홍콩 정부 타도나 중국 공산당 타도를 외치거나 현수막에 써서 내거는 것 등도 이 법에 걸릴 공산이 크다.

외국 정치 세력과의 “공모”도 금지하는데, 이 죄목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중국 공산



항쟁 이후 홍콩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공간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강제 폐간된 〈빈과일보〉 마지막 호를 들고 항의하는 시민들

당 정부와 연계된 공간 기관들로 구성된 특별 공간 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관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고, 가택을 수색하고, 개인에게 어떠한 정보든 요구할 권한 — 이에 대한 묵비권은 없다 — 이 있다. 기관의 집행관들은 심지어 법원 승인 없이 개인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이 기관은 사실상 홍콩 현지의 법에 매여 있지 않으며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중등학교와 도서관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범민주파에 더 투쟁적인 저항을 촉구하는 책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애국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세뇌 교육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상황은 암울하다. 100여 명이 이 법에 의해 구속됐고, 그중에는 범민주파의 2020년 입법회 선거 예비 경선에 출마한 반정부 인사 47명도 있다.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신문 〈빈과일보〉의 발행인인 지미 라이와 그 신문의 고위 간부들도 체포됐다. 정치 단체, 시민사회 단체 40여 곳이 해산을 선언했다. 민간인 권선전, 홍콩직업교사노조, 홍콩직공회연맹(HKCTU), 애국민주운동지원홍콩시민연합회(지련회), 홍콩중문대

등의 학생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할 것인지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조기 해산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당국이 관용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조기 해산하지 않으면 물리적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는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해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그중 하나인 토니 초우항팅 지련회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직면한 위험이 클수록 각 선택의 장단점을 차분히 평가해야 한다. ... 정권은 칼을 뽑아 들었다. 지금 국면에서 정권의 작전에 ‘협력’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이점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2021년 6월 강제 폐간된 〈빈과일보〉와 함께 다른 대안 매체들도 심각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 〈입장신문〉 웹사이트는 지난 기사를 전부 삭제했다. 원칙상으로는 독립적인 편집권이 있는 공영 방송국인 홍콩라디오텔레비전은 지난 1년간 엄격한 정부 검열을 받았다.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일부 진행자는 교체됐다. 홍콩 시민들은 온라인에 글을 올리거나 정치적 구호를 제기할 때 공간 당국에 적발되거나 신고

될까 봐 더 조심스러워 하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분리주의적”이거나 “사회 전복적,” “외세와 공모”하는 행위 뿐 아니라 그런 말도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이 처벌하는 세 법적 범주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중국 당국은 정치적 “레드 라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일부러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홍콩 시민들을 겁먹게 만들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친중 인사들 사이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공개 활동 중인 반대파를 공격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촉매제 삼아 최소 2년 동안 “정치적 숙청”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콩의 사법, 사회, 문화, 이념, 교육 및 언론 기관의 대대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현재 홍콩 기본법 23조와 관련된 입법 절차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그러한 법을 도입하고 싶어 했는데, 2003년 홍콩 시민 50만 명이 행진을 벌이면서 비슷한 입법을 보류시킨 바 있다.



사진: 이윤진

광범한 대중의 참여는 홍콩 사회의 극심한 착취와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보여 줬다. 2019년 6월 16일 200만 시위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의 성격, 구성, 리더십

2019년 운동의 성격과 구성은 어떠한가? 어떤 사회 집단이 참여했는가? 운동은 어떻게 조직됐는가? 핵심 요구와 구호는 무엇이었나?

송환법 반대 운동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 이래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 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홍콩 사람들이 홍콩 반환 이후 현 상황에 대한 불만과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 대중운동에는 주로 청년과 중년 층이 참여했지만, 노년층과 은퇴자들도 참여했다. 대학생, 중등학생, 노동 조합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뿐 아니라 노인들이 조직한 운동 지지 집회도 있었다. 행진과 도심 점거는 주로 SNS를 통해 발의됐고, 파업은 노동조합의 호소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행진이든 봉쇄든 파업이든 사회 운동 단체와 노동조합이 주되게 조직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행동들은 본질적으로 자생적이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분권화되고 조직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됐다.

대중운동은 자생적으로 “5대 요구, 하나도 빼먹지 마라”를 핵심 구호로 채택했다. 이 5대 요구란 송환법 완전 철회, 경찰 폭력 조사위원회 구성,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구속 시위자 석방, 행정장관과 입법회를 선출할 “양대 보통선거권”이었다.³ 다른 유명한 구호로는 “광복홍콩”, “시대혁명”, “자유를 위한 투쟁, 홍콩에 연대하라” 등이 있었다. 국가 폭력이 심해짐에 따라 운동 내에서는 경찰 폐지 목소리까지 나

왔다.

5대 요구 중 어느 것도 사회·경제적 요구는 아니었지만, 폭넓은 대중 참여는 극심한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반영했다. 홍콩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켰다. 홍콩 시민 5명 중 1명, 약 165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산다.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 높다. 송환법 반대 운동에서 처음으로 자결한 청년 마르코 링 링팅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송환법을 부자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만들었지만 나머지 홍콩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없다. 정부는 맹목적으로 부를 추구하면서 청년들을 부자 밑에서 일하는 노예로 만들었지만, 하층민과 서민은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누가 운동을 지도했는가? 더 주류적인 정치 세력은 운동에 참여했는가?

이는 조직적 지도력과 정치·이데올로기적 지도력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조직 면에서, 평화 행진은 주로 민간인권전선이 발의했지만, 관청 습격과 대학 점거는 SNS를 통해 동원됐다. 이 운동은 “큰 무대 없는” 저항을 표방했다. 야당도, 사회운동 단체도 지도를 자임하지 않았고 감히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러 행진을 발의한 민간인권전선도 운동의 모든 측면을 지도할 권위와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대중이 참여할 무대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운동은 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상을 반영했다. 우익적 관점에서 중국으로의 통합에 반대하는 극우적인 홍콩 본토주의의 친미·반중적인 조류가 이 운동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불행히도 좌파 또한 운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파편화돼 있었다.

“큰 무대 없는” 저항이라는 관념은 온건한 민주당 인사들의 약점과 타협에 대한, 특히 젊은 활동가들의 불만에서 비롯한 면이 있다.⁴ 이 활동가들은 운동을 지배하려는 정당 일체를 불신한다. 하지만 극우 본토주의자들 역시 끊임없이 이 관념을 설화하며, 심지어 자신들이 “큰 무대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하고 진보적 사회운동을 비방해서 운동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운동의 한 구호인 “분열하지 마라!”는 표면적으로는 상호 비방 없는 평화 시위와 행동 통일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극우 본토주의자들이 비판에서 자유로운 체조직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효과를 낸다.

좌파인 우리는 관료적·상명하달식 조직이나 아니면 조직되지 않은 형태

의 시위나 하는, 어느 선택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사태를 바라보지 않는다. 제3의 대안이 있다.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아래로부터의 조직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의 장이 되고, 더 중요하게는 운동을 약화시키는 개인들의 행동에 대항할 집단적인 힘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대중의 자기 조직화를 향한 중요한일보 전진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의 운동은 이런 목표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이 운동의 주요 약점이었다.

2019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대중 저항이 일어났다. 홍콩 사람들은 이러한 더 광범한 운동과 스스로를 동일시했는가?

홍콩 항쟁이 벌어지는 동안 카탈루냐 독립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홍콩 대중이 카탈루냐나 전 세계의 다른 투쟁과 스스로를 동일시한 것은 아니다. 홍콩은 세계 시민주의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홍콩의 일반 대중은 그다지 국제적 마인드가 없고 대부분 여전히 영국

과 미국 주류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송환법 반대 운동은 결코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다. 2019년 이란, 이라크, 에콰도르, 칠레에서 대중운동이 분출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2011년 ‘아랍의 봄’에 빗대 “개발도상국들의 봄”으로 일컫기도 했다. 프랑스와 카탈루냐 등 선진국에서도 만만찮은 운동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투쟁을 촉발한 쟁점도, 투쟁의 방식도 저마다 달랐지만, 이러한 반란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분노를 공통점으로 한다.

심각한 빈부격차가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현 질서에 대한 깊은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은 홍콩과 중국의 지배계급도 아는 바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이 운동을 반년 넘게 지속시킨 불쏘시개가 됐고, 다수 여론은 여전히 시위대를 지지한다. 송환법은 항쟁의 기폭제였을 뿐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금융·부동산 자본가의 착취 행태, 부자들에게 굶질거리는 홍콩 정부에 있다.

2019년 이후 홍콩과 여타 지역의 투쟁들은 어느 정도 리더십의 위기를 보였는데, 이는 특히 “분권적이고 리더 없는” 운동을 표방한 홍콩에서 심각했다. 수단 혁명의 “저항위원회”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이 만들어낸 “총회들의 총회”와는 대조적이다.

3. 홍콩 정부의 수반인 행정장관은 현재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후보들은 대부분 중국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제한된다. 이 선거인단을 선출할 권리도 매우 제한적이다. 2016년에 등록된 유권자는 24만 6000명에 불과했다.

4. 민주당은 ‘범민주파’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이다. 민주당은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다른 범민주파 정당들과 “친중 진영” 조직들과 경쟁한다.



시위자를 체포하는 홍콩 경찰

사진: 송지(Shodo Incendo/블라카)



코로나19 초기 국면은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을 가속시키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2020년 2월 4일 파업을 벌이는 홍콩 병원 노동자들

2014년 우산 운동과 2019년 운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2014년 우산 운동 같은 이전의 운동과 2019년의 운동 사이의 연속성과 차이점은 무엇이었나?

홍콩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고조된 오랜 투쟁의 주기가 이어졌다. 2009년 홍콩 고속철도 연결 반대 투쟁과 2012년 국가 교육과정 시행 반대 투쟁도 그 일부다. 이러한 시위의 근저에는 홍콩 정부가 도시 계획 정책에서 거대 컨소시엄을 편애하고 중국 정부가 중등 교육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도입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의 급진화가 있었다. 2014년 우산 운동과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도 대중투쟁의 이 기나긴 연속의 일부다. 이 모든 투쟁들의 공통점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얻어 내기 위해 급진적인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욕구였다. 비록 주도면밀하게 숙고된 계획은 없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계보에도 불구하고 2019년 운동은 이전 운동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첫째, 입법회 선거와 행정장관 선거에서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려고 했던 우산 운동과는 달리, 송환법 반대 운동은 기존의 개인 자유와 기본권이 더 침해당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공세적인 투쟁이 아니라 방어적인 투쟁이었다.

둘째, 우산 운동이 후퇴하지 않는 “용감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간 거리 점거와 같은 전술을 추구했다면, 송환법 반대 운동은 초기에 더 유연한 전술을 채택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탄압에 맞서 위치를 완강하게 사수하기보다는 “스마트 투쟁”으로 묘사되는 시위 전술을 구사했다.

셋째, 우산 운동 때는 많은 극우 본토주의자들이 “홍콩을 우선하라” 같은 데마고기적 구호로 운동을 납치할 수 있었다. 이런 구호는 대체로 중국 본

토에서 온 새로운 이주자와 관광객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다. 반면, 송환법 반대 운동에서는 극우 본토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뚜렷하기는 했지만 약화됐다. 2019년 운동 참가자의 다수는 평화 시위와 파업을 지향하는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극우 본토주의자들을 비판했고, 상당히 현실적이게도 중국 본토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예컨대 2019년 7월 7일 가우룽 지구에서 벌어진 한 시위에서는 시위 조직자 일부가 외국인 혐오적인 본토주의 성향을 보였지만, 기층 활동가들은 관광객들에게 중국어 간체로 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인터넷서널가를 부르며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구호는 베이징대의 공산당 간부인 유 케팡이 쓴 유명한 책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전체 시위대는 분명 극우 본토주의 경향을 띠지 않았다.

조직 노동자들이 운동에서 한 구실

지난 몇 년간의 운동에 노동자들, 특히 조직 노동자 집단은 얼마나 관여했는가?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노동계급 투쟁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 부문 파업, 2007년에는 건설 노동자 파업, 2013년에는 부두 노동자 파업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노동자들의 활동과 계급 의식 수준이 높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019년 운동은 1967년 소요 이후 처음으로 정치 파업 문제를 의제로 올

렸다.⁵ 2019년 8월 5일, 약 35만 명의 항공사 및 공항 직원들, 사회복지사들, 교사들이 파업을 벌였다. 전체 항공 관제사의 3분의 1이 파업에 참여한 듯하며, 캐세이퍼시픽과 홍콩항공 객실 승무원들도 동참해 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했다. 지하철도 만나질 동안 멈춰 섰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전면 파업이 아니었고, 일부 노동자들(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고용주의 보복을 피하려고 연차를 내서 행동에 참여했다. 그냥 직원들에게 하루 일을 쉬게

한 고용주도 있었다. 그러나 이 파업은 상징적인 하루 파업이었을 뿐이라 해도 큰 도약이었다. 2014년 우산 운동 때는 부두 노동자들만이 도심 점거에 참여했고, 사회복지사 2000명만이 운동을 지지하는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노동자들의 동원 규모가 훨씬 컸다.

5. 1967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고무된 파업과 소요가 홍콩을 뒤흔들었고, 이에 따른 정부의 양보로 임금과 생활 수준이 오르고, 공공서비스 투자가 늘어났다.

홍콩 운동은 친서방 운동이 아니었다

일부 좌파는 홍콩의 최근 운동들을 친 제국주의 운동으로 규정하고, 영국과 미국 정부가 그 운동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운동들을 중국에 맞서는 데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는가?

중국과 홍콩의 핵심 권력층, 중국 바깥의 포스트스탈린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은 우리 운동이 서방의 조종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런 비난은 거짓이다. 운동은 시민들 자신의 참여로 시작됐으며 주된 원동력은 청년 시위자에서

나왔다. 외국 정부는 여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일부 범민주파 의원들과 조슈아 웡 같은 저명한 활동가들은 서방에 호의적이고 미국 정부를 상당히 신뢰한다. 이들은 언론에 자주 출연하지만, 그저 비교적 잘 알려진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도 운동을 주도하지 못한다. 그들 스스로가 지도부임을 매우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둘 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탄압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미국 법 집행 기관과 홍콩 경찰 사이에는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다. 홍콩 경찰이 동원하는 무기와 진압 기술은 수

년간 미국 기업들이 공급해 온 것이다. 똑같은 진압 기술이 미국의 흑인 시위대와 그 지지자들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일부 좌파는 여전히 진영 논리를 고수하면서, 몇몇 반미 정권을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 세력으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잘못된 격언을 자신의 노선으로 삼기도 한다. 중국의 지배 체제를 “반제국주의”라고 지지하면서 그 체제를 비판하기를 거부하는 좌파들은 이 국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계급을 억누르는 관료적 자본주의 체제다.

홍콩 운동과 중국 본토 운동의 전망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임금이나 공장 폐쇄와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 노동자 투쟁들이 있었다. 다만 홍콩의 운동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인다. 홍콩의 운동은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이 두 운동 사이의 간극이 메워질 전망이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 홍콩에서 벌어진 대중투쟁들의 주요 쟁점은 민주주의, 보통선거권,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지만, 그 투쟁들 중에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투쟁도 포함돼 있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중국 본토의 노동자 투쟁 수준은 비교적 높았지만, 중국 본토에서도 페미니즘 운동, 기업의 환경 오염에 맞선 주민들의 저항 등 다양한 시민 운동의 흐름이 함께 있었다.

1990년대 이래 홍콩 활동가들은 중국의 노동운동, 인권 운동, 젠더·성소수자 운동, 환경 운동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중국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홍콩에서 상대적으로 시민적 자유가 더 허용된 덕분에 활동가들은 사회운동 관련 문헌을 중국으로 전파하고, 중국 본토와 홍콩 활동가들 사이의 지적 교류를 자극하고, 본토에서 일어난 저항에 대한 연대를 조직할 수 있었다. 홍콩에서만 출판될 수 있었던 많은 책들이 중국 본토로 반입됐는데, 여기에는 중국 본토 저술가들이 쓴 것도 있었다. 그러나 홍콩에서도 사회운동에 관한 논의가 갈수록 탄압받고 있다.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해지고 수많은 노동 NGO가 해체되면서 이러한 역할은 심각하게 약화됐다. 향후 몇 년간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양측 활동가들이 지난

10년의 경험을 되짚어 보고 정보 교류와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이는 운동이 미래에 다시 나타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사회주의 좌파는 이 과정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홍콩과 중국에서 향후 운동의 전망은 어떠한가?

운동의 패배는 언제나 흥터를 남긴다. 1968년 프라하의 봄과 1989년 중국의 톈안먼 광장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운동이 패배한 이후 수년간의 침체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홍콩은 1989년의 중국과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 자유를 계속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적과 인터넷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어느 정도 원활하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공간 기관의 감시는 중국 본토나 1949~1987년 계엄령하의 국민당 치하 대만만큼 심하지는 않다.⁶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대중운동은 기억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면 미래의 운동이 이전의 경험에서 배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한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평가다. 중국 본토에서조차 청년들은 가치 있는 정보를 찾으려고 인터넷 검열을 뚫는 일이 흔하다.

현재의 침체기는 언제 끝날 것인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듯하다. 중국에서는 1989년 이후 강력한 대중운동이 없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농민의 투쟁이 부활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1977년에 ‘77현장 운동’이 일어났다.

홍콩 민주주의의 미래는 상당 부분 중국 본토의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달려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을 보여 주는 홍콩의 오래된 아파트



희망은 홍콩의 저항과 중국 본토의 투쟁이 만나는 데에 있다. 홍콩 항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2019년 11월 말 광둥성 마오밍시에서 벌어진 시위

있다. 중국 공산당의 관료적 통치가 계속 강력하게 유지된다면 홍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현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중국의 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중국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정의에 따른, “독점 자본”의 지배에 기초한 제국주의 국가가 됐다. 중국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근본적으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중국의 독특한 특징은 관료적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당-국가 자본주의라고도 부를 만한 국가자본주의 모델이다. 이러한 국가 형태는 관료 집단에 의한 부패와 국가 재산의 전용을 부추기지만, 보통의 신자유주의보다 경제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관료와 자본가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 노동자들에게는 착취적이고 억압적이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더는 반제국주의를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뒤늦게 발전했지만 강력한 국제적 경쟁자가 됐다. 중국은 이제 자본수출,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 군사력 확장을 통해 아시아의 역내 패권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참상은 중국에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중국에서 노동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크게 감소했다. 2020년에 중국 총리 리커창은 월 소득이 1000위안(한화 약 18만 원)에 불과한 인구가 6억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경제 위기와 사회 위기 모두 가속화하고

있다. 사회 정의에 대한 호소가 힘을 얻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 본토에 비해 더 허용되던 홍콩의 권리와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 인민과 중국 인민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됐다. 홍콩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은 중국의 당-국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일부다. 우리는 만국의 인민, 특히 중국 본토의 인민을 동맹으로 삼아야 한다.

6. 장제스가 이끈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은 1949년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뒤 대만으로 망명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그 섬을 지배했다. 계엄령은 1949년 5월에 선포됐고 38년 후에야 폐지됐다. 이 “백색 테러” 기간 동안 14만 명이 공산당 지지자로 몰려서 투옥됐고 약 4000명이 처형됐다.

홍콩의 좌파 현황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광범한 결집체든, 그보다는 범위가 협소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단체든, 홍콩의 운동 내에서 조직 좌파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좌파 내에는 어떤 정치들이 존재하는가?

홍콩의 좌파는 작고 분열돼 있으며, 좌파 진영 내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광범한 좌파 조직들에 더해 소수의 아나키즘적인 네트워크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사회주의 좌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2009~2014년 사이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고, 특히 2010년 광범위한 좌파 플랫폼인 ‘레프트21’이 형성됐다. 여기에는 80~100명의 젊은 회원들이 있었다. 레프트21은 2013년 부두 노동자 파업에 연대하는 데서 적극적인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이후 극우 본토주의 이데올로기가 부상하면서 광범한 좌파가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심지어 일부는 극우로 넘어가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좌파는 2019년 운동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오늘날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사회주의 좌파는 새로운 세대의 청년들과 함께 대중이 가장 우려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명확히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야만 점차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홍콩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

홍콩은 이미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 경제에 고도로 통합된 도시이기에, 홍콩의 미래는 중국 전체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홍콩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중앙정부다. 따라서 홍콩의 민주적 자치를 달성하려면 최선을 다해 중국 전역의 노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온전한 민주적 자유와 노동계급 권력을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

그래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홍콩 독립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중국 내의 노동자 투쟁과 페미니즘 운동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을 촉진해야만 중국 본토와 홍콩을

지배하는 관료적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독립 요구는 중국 본토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홍콩 주민과 중국 주민을 분열시키고 홍콩 주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들을 왜곡하려 하는 세력들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홍콩 독립 요구는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선택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보통선거에 의한 홍콩 주민 대의 기구”를 세우자는 일반적 구호를 지지하지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환상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한 기구를 소집할 힘과 결의가 있는 세력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 대중뿐이다. 미래에 대중투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의지를 관철시키고 반자본주의적인 사회·경제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티내셔널 소셜리즘》 2022년 겨울호 번역 김동욱

SPC(파리바게뜨) 또 합의 위반 화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파업권 제한 추진

안우춘

SPC 사측이 지난해 9~10월 벌어진 SPC 화물 노동자 파업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던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SPC지부 정호화 부지부장은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하며 이렇게 말했다. “SPC 사측의 수법이 항상 그랬어요.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담당자만 교체했어요. 이번에도 수법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10월 20일 화물연대는 SPC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대표(고려운수)와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에는 광주 조합원들 해고 철회, 광주센터 노선 조정(코스, 배차), 사업장별 현안 해결, 기존 손해배상 공제액 지급,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겼다.

그러나 파업이 끝난 지 3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 적잖은 합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철회됐지만, 노선 조정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원주센터와 대구센터 등의 주관 운송사 교체 약속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손해배상과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추진에 불만을 토로했다.

SPC 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운송사들에게 제기한 3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운송사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사측은 파업 전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SPC지부와 대경지역본부 SPC지회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9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임금에서 공제된)을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조차 12월 말이 돼서야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급됐고, 다수는 아직 공제된 임금(운임)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호화 부지부장은 말했다. “합의서가 작성했는데 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냐고 운송사에 따졌어요. 운송사는 SPC GFS(SPC의 물류 담당 회사)가 자신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직을 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차량 매매 자체도 막고 있어요. 손배가 진행 중이니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일을 그만두려면 예상되는 손해배

상 금액을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몇몇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탈퇴를 유도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SPC 내 한국노총 간부가 ‘한국노총에 가입하면 손해배상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흔들고 있는데, 회사의 언질이 있었을 법하다”는 것이다.

**대체 수송 저지는
정당한 파업 활동**

한편, SPC 사측(원청 물류회사인 SPC GFS)은 파업에 나섰던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파업 기간 노동자들이 원주, 대구, 청주 청원 등 물류센터 앞에서 벌인 투쟁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을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최근 법원은 원주 물류센터에 대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원주 물류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고시문이 부착됐다. “(원주 물류센터) 내부와 출입구 및 출입구 기준 반경 50미터 이내의 도로에서 차량의 입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을 고시합니다.”

1월 18일에는 청주 청원 물류센터에 대한 가처분 소송 재판이 열린다. 서울 경기, 청원, 대구, 양산의 화물연대 조합원 122명이 출석 통지를 받았다.

이 소송은 앞으로 주요 물류센터 앞에서 대체수송 저지와 같은 쟁의행위를 불법화해 제한하고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다.

SPC 사측은 지난해 파업 말미에도 노동자들에게 화약서를 요구했다.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도 저항에 나서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예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사측은 저항에 밀려 화약서를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의 손을 빌려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업을 하면 업무 방해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파업 시 대체수송을 저지하는 것은 파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이다.

SPC 사측은, 노사 합의서에 사인한 것은 대표운송사였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지난해 운송사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화약서를 압박했던 것도, 결국 노동자들의 항의에 밀려 합의를 체결했던 것도 원청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원청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바도 있다.

화물연대 SPC지부는 사측을 규탄하는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양재동 사옥, 주요 물류센터 앞에 집회 신고를 내기로 했고, 현수막 게시, 홍보전, SPC그룹 내 민주노총 사업장과의 연대 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설 성수기 파업을 지지하라

일부 지역 롯데·한진·로젠 택배도 작업중단 예고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15일째(1월 11일 현재)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파업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업 대오가 흔들리기는커녕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회도 새롭게 창립되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 분류 작업 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는 사실상 노예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에 비조합원들도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권감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이천지회 조합원)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이 많은 지역들에서 배송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성수기(1월 17일부터)가 다가오면서, 배송 차질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월 17일부터 한 달간을 ‘설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력 1만 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이뤄지는 ‘특별’ 인력 투입으로는 항시적인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어렵다. 어느 회사,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투입되는지도 불분명해서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사실상 택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 정부가 인력 투입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거나 강제하지도 않는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사측은 이미 파업 이틀 만에 조합원들이 다수인 지역에 접수 중단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 따르면, ‘특별’ 인력 투입

방침이 파업 파괴(대체인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반면, CJ대한통운의 접수 중단으로 물량을 이관받은 롯데, 한진, 우체국, 로젠택배의 물량은 이미 50퍼센트 이상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보다 물량이 30퍼센트 이상 늘는 설 명절 특수기까지 겹치면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엄청 세진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부의 미봉책으로는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택배노조는 오는 1월 14일까지 노사 대화가 불발될 경우, 물량 이관으로 노동강도가 세진 지역의 롯데, 한진, 로젠택배 노동자들이 18일부터 ‘택배 멈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말했다.

“CJ대한통운의 물량들이 타 택배사로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J대한통운 파업 조합원들이 많은 경기도 동남권과 영남 지역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택배노조)는 이들 지역의 한진, 롯데, 로젠 사측에 집화 제한(접수 중단)을 이번 주까지 요청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8일부터 이곳 한진, 롯데, 로젠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그간 정부는 분류 인력 투입 상황에 대해 택배사의 보고대로 발표하거나, 점검할 현장을 미리 통보하고 방문하는 등의 보여 주기 식 조사를 해 왔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없는] 터미널에 가서 파업 홍보를 하는데 80명이 일하는 터미널에 분류 인력은 8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조합원이 별로 없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조사 나온다고 하면 비조합원들에게 분류 인력 조끼

를 입히기도 했습니다.”(김춘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서부산지회 사상분회장)

국토부의 발표 내용에는 요금 인상분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과로사를 유발시키는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이 두 사안은 분류 인력 충원 못지않게, 노동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파업의 핵심 요구들인데도 말이다.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CJ대한통운 사측의 사회적 합의 위반과 조건 개악 시도를 승인·방조하는 셈이다. 전국택배노조는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 “CJ대한통운 파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제 와서 보여 주기 식 점검?

그동안 주류 정당 대선 후보들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적극 연대하고 있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지를 밝혔다.

최근에는(1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위원회가 CJ 그룹 본사 앞 택배노조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택배노조 지도부, 단식 농성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이 1월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주영 상임공동위원장(국회의원), 신승철 상임공동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공동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3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 사측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정

부·여당도 책임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런 만큼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선대위의 노동위원장은 “설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 지난 1월 4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택배노조의 정책 질의에 “사회적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CJ대한통운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문제는 애써 언급을 삼가며 답변하길 회피했다.

택배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월 18일부터 2000명 규모의 차량 상경 투쟁을 벌이고, 14일부터는 단식농성을 1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이 늘어난 롯데·한진·로젠택배

노동자들이 예고한 파업을 실행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투쟁이 더욱 확대된다면 정부·여당과 이재명 후보 측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사측의 양보를 받아 내기 수월할 것이다.

CJ대한통운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파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소속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택배 파업 연대차 현장을 방문했는데, 파업 노동자들이 “정말 큰 힘이 됐다. 고맙다”며 환대했다. 진보당 당원들도 파업 중인 택배 터미널 여러 곳을 지지 방문하고 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해외 좌파 활동가 초청 강연 팬데믹 3년차, 세계경제와 정치

1월 20일(목) 오후 8시
발제 조셉 추나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 전문 통역사의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meeting0120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팬데믹 3년째입니다. 각국에서 유례없는 규모의 경제 개입으로 파국을 막았지만, 경제 재가동과 함께 공급대란이 벌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새로운 위기의 조짐도 보입니다. 팬데믹의 제약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벌어지는 한편, 우파의 부상도 눈에 띕니다. 팬데믹, 경제 위기, 기후 위기라는 다중 위기 속에서 올해 세계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유익한 좌파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TV를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주말 pick)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채널 바로가기

노동자연대 TV의 새 코너

시사/이슈 토크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봐야 할까?
-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불평등, 백신패스 논란
- ...